

##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주요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시장재개발에 관한 특례)
  - 제1항 : 통상산업부 장관은 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에 속하거나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시장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장 재개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건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대상지역의 시장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안의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다.
- 제3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대상지역의 시장 재개발을 하는 동안 시장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 시장을 마련하는등 시장 재개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4항 : 시장재개발 대상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한 주택개량시 부속 토지 규정 개정과 재래 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내무부 세 제 13400-434(96. 12. 30)호 및 경기 세정 13400-35(97. 2. 5)호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안) 시달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 권리·의무와 일상생

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가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